

근로자 끼워넣고, 위장 폐업 제도악용 부정수급액 16.5억

고용부, 의심사업장 기획조사
총 11개 사업장서 263명 적발

근로자 임금 체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일한 적 없는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위장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돈만 16억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정수급한 사업주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3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10월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총 11개 사업장에서 26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하게 탄 금액은 총 16억 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평균

적발액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대지급금 지급 정보와 임금 체불 관련 사건 정보 등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가 커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았다.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한 사업주도

있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대상으로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 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정부에 갚지 않은 대지급금 규모가 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 결과 지난 달까지 172개 사업장에서 109억 6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24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별 중량 차이가 컸고 치킨 한 마리의 영양성분 함량이 1일 섭취기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스

네네 '쇼킹핫치킨' 양도 칼로리도 '최대'

한국소비자원, 프랜차이즈 치킨
10개 브랜드 24개 제품 성분조사

포화지방·콜레스테롤 함량은
굽네 '치즈바사삭'이 가장 높아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의 열량이 성인 여성의 1일 섭취기준의 최대 1.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치킨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최대 3배를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10개 브랜드 24개 제품의 영양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치킨 한 마리 열량은 1554kcal~3103kcal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kcal,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했다.

제품별로 열량의 경우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이 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고, '고추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은 1일 추정량의 78%로 가장 낮았다.

포화지방은 '치즈스노빙'(네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27%로 가장 높았고,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간장/마늘맛)과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 매운맛)이 1일 기준치의 87%로 가장 낮았다.

콜레스테롤은 '치즈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03%로 가장 높았으며, 함량이 가장 낮은 '소이갈릭스'(비비큐(BBQ), 간장/마

늘맛)도 1일 기준치의 180%에 달했다.

치킨 100g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427mg으로 '소이갈릭치킨'(네네치킨, 마늘/간장맛)의 함량이 513mg으로 가장 높았고,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마늘/간장맛) 함량이 257mg으로 가장 낮았다. 당류 함량은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간장/마늘맛)이 가장 낮았고, 반면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과 '팽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매운맛)이 가장 높았다.

제품 별 중량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매운맛 제품인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이 1234g, 치즈맛 제품인 '슈프림골드 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이 1101g으로 중량이 많은 편이었다. 시험대상 치킨의 가격은 최하 1만 6000원에서 최고 2만 2000원이었다.

치킨 반 마리를 풀라 1캔과 함께 먹을 때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였고,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 열량은 1290kcal로 하루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했다.

이번 시험대상 업체 10곳 중 치킨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한 업체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비비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4개 업체 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과 포화지방 등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 조절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연동계약 체결하면 하도급 벌점 깎아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행정예고
공정위,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

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인상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1월 15일~12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이러한 벌점 감경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5점 초과시 공공입

찰 참가제한 요청을, 10점 초과 시엔 건설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 제재가 이뤄진다.

우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공정화지침은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을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다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은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쌀 작황 부진에도 소비 줄어 '공급과잉'

통계청, 올 생산량 376.4만t... 3% ↓

올해 쌀 작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벼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 4000톤으로 전년(388만 2000톤) 대비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은 전년 73만 2477ha에서 올해 72만 7054ha로 5000ha(-0.7%)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낱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한남노 등 태풍과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수 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 초과 생산돼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9월 25일 농진청 작황조사에 따라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해 당시 시중 구곡재고 등을 고려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



충북 괴산군 내 9개 농민단체가 지난 7일 괴산문화체육센터 앞에 공공비축미를 담은 톤백마대를 쌓고 있다. /뉴스

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올해 수확기 시장격리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총 140곳 대상 내달 9일까지 실시

최근 화학물질 폭발사고나 유독물질 급성중독사고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잘 지키는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기간이었던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점검한 결과 42곳에서 6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가스·전기 안전 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 조치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